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공항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마약 탐지견이 탐지한 마약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제공=뉴스1 /사진=(인천=뉴스1) 이승배 기자정부가 어린이 제품 등에 한해 국내 안전 인증(KC 인증)이 없는 해외제품의 직구(직접구매)를 금지하도록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라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는 위해성이 없다는 점만 확인되면 KC 인증이 없더라도 해외직구가 가능하다며 정책 재검토를 시사했다.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어린이가 사용해 각별한 관리가 필요한 제품 △화재 등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일부 전기·생활용품 △유해성분 노출 시 심각한 위해가 우려되는 생활화학제품 등 KC 인증마크를 받지 않는 80개 제품의 해외직구 금지한다고 밝혔다.유모차와 완구 등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과 전기온수매트 등 전기·생활 용품 34개 품목은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가 금지되며 가습기용 소독제 등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은 신고·승인이 없으면 직구 금지 대상이 된다.하지만 대책 발표 이후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를 중심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상에서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 목소리가 높다. 정치권도 비판에 가세했다. 총선 이후 현안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인 해외직구시 KC 인증 의무화 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재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이보다 앞서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KC인증이 없는 80개 제품에 대해 해외직구를 금지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며 "안전을 내세워 포괄적 일방적으로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것은 무식한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논란이 커지자 정부도 해명에 나섰다. 국무조정실과 산업부, 환경부 등은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80개 품목 전체가 해외직구가 당장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정부는 해외직구 제품을 대상으로 위해성 검사를 집중 실시한 후 오는 6월 중 실제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위해성이 없다는 점만 확인되면 KC 인증이 없더라도 계속 해외직구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기존 발표 정책에서 사실상 한 발 물러선 셈이다.또 소비자 선택권이 극도로 제한된다는 일부 비판도 수용했다. 정부는 성인용(만 13세 초과 사용) 피규어는 어린이 제품에 포함되지 않으며 만 13세 이하가 사용하는 어린이 피규어 제품만 위해성 검사를 실시해 실제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을 중심으로 반입을 차단하기로 했다.아울러 위해 우려가 높아 반입을 차단할 품목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만큼 해외직구 이용에 대한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법률 개정 과정에서 국회 논의 등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한편 정부는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추가 설명을 내놓을 예정이다.